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민심과 정기국회 구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민심 확인한 여야 '불꽃 공방' 예고

다음주 대정부질문 시작...국정감사·내년 예산 심사 등 준비 민생·개혁법안 이견 여전...야, 국정감사 정부 실책 부각 의지

여야는 다음 달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무대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남북관계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 동안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특히 사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은 현 경제 상황을 정정화하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여야는 애초 지난 13~14일, 17~18일 대정부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14일) 등을 고려해 13일 정치 분야 일정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회담 이후로 미뤘다.

전조전 성격의 13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값 급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같은

쟁점은 다음 달 1일 재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이 이전 보수 정권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 등에서 보듯 문재인정부가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며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을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며 평양공동선언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비공개 예

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추석 연휴 직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한 모종의 '폭로'를 예고,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민생·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도 이어진다. 여야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상기입대차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했으나, 각 당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쟁점 법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집권 2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과 핵심 국정과제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당 등 야당은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FTA 국회 비준 나서자"

내주 대미특사단 파견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의 국회 비준 절차에 즉각 나서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에 대해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는 조속한 합의를 통해 한미 무역마찰의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경제 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당 차원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에 대미외교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추미에 전 대표를 단장으로 설훈 최고위원,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수혁 국제위원장, 김한정 의원 등 5명

의 방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10월 1일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질문에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잇는 성격의 선언이기에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으로 충분히 갈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4 선언 기념 행사를 남북이 공동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일내 5당이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여를 제안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평화를 경제로 견인하려는 추석 민심에 귀 기울이며 여야 소통 강화를 통해 정치권이 함께 평화를 경제로 연결하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여야 "한미 비핵화 공감대 환영"

정상회담 긍정 평가

여야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기는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의 중요한 내용은 비공개로 남겨졌지만, 양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 폐기 원칙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이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이 도출되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 정착될 때까지 한국당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중전선언과 2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하니 조만간 가시적 일정으로 진전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석 대변인은 "이제 미국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물 들어올 때 돌 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멀어져가는 평화·정의당 교섭단체 복원

손금주·이용호 의원 영입 무산 이어 민중당 연대에 의견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공동교섭단체 복원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원내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각 상임위 간사자리를 모조리 박탈당하는 등 타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교섭단체 복원 방안을 강구해왔다. 두 당의 의원 수는 민주평화당 14명, 정

의당 5명으로 총 19명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에 딱 1명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의원 1명만 데려오면 되는데,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평화당은 옛 국민의당 시절 한술밥을 먹었던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영입을 가장 먼저 타진했지만, 두 의원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민중당 김중훈 의원 영입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평화당 지도부가 김 의원 영입을 물밑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평화당은 일단 정의당이 민중당과의 연대 여부에 대한 당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이후에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정의당이 민중당과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민중당 인사들과 구원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화·정의·민중 연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민중당 구성원 다수가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라는 데 거부감을 가진 평화당 내 의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기적으로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골든

타임'을 넘겼다는 말도 나온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국회 일정이 이어지는 데다, 이후 야당 발 정계개편이 시작되면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은 카드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옛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3명의 출당 정도다. 평화당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이들 의원의 출당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의석수(30석) 축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을 출당 조치할 가능성은 작다. 평화당 관계자는 26일 "당분간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 유시민(사진) 작가가 내정됐다. 4년 6개월째 이사장을 맡아 재단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사의를 밝혔기 때문이다. 당 대표와 재단 이사장을 동시에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6일 "이 대표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가기 전 유 작가를 만나 재단 이사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유 작가가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 작가가 최근 방송 활동 등에 폭 빠져있지만,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이 의미있는 일인만큼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재단 회원들은 굉장히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유 작가가 내정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공식 선임은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재단 정관상 신임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회 과반의 찬성을 얻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